

大學教育 政策의 결정 과정

金 信 福

(서울大 行政大學院)

1. 序 言

第6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새 정부는 政治·行政의 모든 領域에서 역제되었던 요구의 噴出과 變革에의 기대에 당면해 있다. 그러한 요구와 기대는 그동안 民主化 운동에 앞장 서 온 大學社會에서는 한층 강렬하다. 대학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그 내용 자체도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정책의 결정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면 과거의 대학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合理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解答을 위해서는 방대한 사례 연구들이 先行되어야 하겠지만, 本稿에서는 '80년대 이후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인 관찰 소감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2. 大學教育 政策決定의 特性

대학에 관한 정책은 그 성격과 배경 면에서 타 정책들과 비교할 때 약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속성은 대체로 교육 정책에 공통적인 것들이지만 大學教育 政策 고유의 측면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정책은 政治的인 力學 關係와

관련이 적은 분야이다. 정치·외교·국방 분야의 정책들과 달리 政權의 安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정책처럼 金錢的인 利權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大學教育 政策만은 결코 政治적인 考慮를 排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大學教育 政策이 政治적으로 敏感한 대상이라는 사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合理性을 阻害하는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示唆한다. 政治적인 고려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歪曲하거나 黨利黨略에 따라 정책을 操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학교육 정책은 그 1차적인 적용 대상이 大學이지만 中等教育을 비롯한 교육 체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대학 입시 정책은 곧 바로 高校教育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하고 一流大學에의 選好 傾向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 입시 정책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波及效果가 절대적이다. 그밖에 학사 관리나 정원 관리에 관한 정책도 下級學校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敎職員의 처우와 신분, 학생 납입금 등에 관한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보니 大學教育 政策은 利害 關係를 갖자

나 관심을 가진 집단이 많다. 대학의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學父母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규모의 政策對象集團(client group) 내지 關心集團(attentive group)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육 정책의 決定 및 執行 과정에서는 항상 外部로부터의 關與와 雜音이 그치지 않는다.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一家見이 있으며 자기 나름의 代案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成人들이 中等教育 이상의 학교 교육을 받았고, 또 學父母로서 子女教育을 맡고 있으므로 각자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教育政策에 대해서 專門家然하는 현실 때문에 교육 정책 수립에 적지않은 制約이 되고 있는 점을 否認할 수 없다.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타 분야 人士들의 불필요한 關여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常識的인 판단이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을 토대로 導出된 정책 대안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 대학 입시 제도 등은 輿論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소리가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政策 變更에의 압력을 형성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壓力集團은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爭點(issue)은 물론 경제 정책과 노동 문제 등 국가적인 關心事들을 集團行動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지만, 자신들과 직접적인 利害關係가 있는 學園 문제에 대해서도 結集된 주장과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集團 意思 표시는 學事管理를 비롯한 대학교육의 質的 統制 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정책은 對象集團의 意思뿐 아니라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와 費用과 效果를 비교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교육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計量化시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교육 정책은 효과와 여타의 狀況變數(situational variable)의 영향을 분리시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¹⁾ 그러므로 교육 정책의 成果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大學教育 政策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責務性(accountability)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高位 정책 결정자들의 在任 期間이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여러 분야의 정책들 중에서도 大學教育 政策은 合理的이고 自律的인 과정을 거쳐 수립·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학 정책의 결정 과정은 관심과 感受性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관찰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행정과 자율적인 意思決定을 강조하면서 실재는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학교육 정책은 모범적인 교육의 素材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過程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교육 정책은 그 주요 대상 집단이면서 실천을 담당할 主體들이 대학 교직원들이라는 점에서 自律性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이다. 대학의 교원은 最高의 知性과 職業倫理를 지닌 專門職이기 때문에 대학에 관한 정책들은 가능한한 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학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不合理했던 측면과 制約 要因

'80년대 이후에 수립된 대학교육 정책들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大學 卒業定員制 실시와 定員 擴大 조치, 그리고 입시 제도의 개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밖에 學園 自律化 조치를 비롯한 一聯의 학원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1) James S. Coleman, "Problems of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 Studying Policy Impacts," Kenneth M. Dolbear (ed.), *Public Policy Evaluation*(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75), p. 29.

이러한 주요 정책들의 추진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흔히 文教政策의 代名詞처럼 지적되어 온 朝令暮改式의 정책 변화가 되풀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학교육 정책들이 그동안 순하게 변경되어 온 과정은 어느 言論人이 쓴 單行本에 赤裸裸하게 묘사되어 있다.²⁾

우선 대학 입시 제도만 해도 1980년 7·30 개혁 조치를 통해 先試驗·後志願制로 전환한 이래 學力考查와 內申成績 反映率, 지원 대학 및 지망 학과 수, 前·後期 모집, 論述考查 실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속해서 修正되어 왔으며 결국에는 1988 학년도부터 先志願·後試驗制로 환원되고 말았다.

卒業定員制 역시 초과 모집 비율, 學年別 탈락 비율, 탈락 방법, 수료생 구제 방법 등에 관해서 해마다 변경을 거듭하여 有名無實化되더니 1987년 대통령 지시로 入學定員制로 환원되기에 이르렀다.

學園自律化 조치만 해도 規制와 解除가 반복되었다. 1980년초에는 1974년 학원 사태로 제적되었던 학생들의 再入學과 解職敎授들의 재임용을 허용했다가, 1980년 5월 17일 이후 이들 중 학원 사태에 가담한 학생은 다시 除籍되었으며 復職되었던 교수들을 포함한 일부 교수가 解職되었다. 그후로도 학원내에서 과격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시 적지않은 학생들이 제적되었다. 그러다가 정부는 1983년 12월 갑자기 學園自律化 方針을 발표하여 해직 교수를 復職시키고 除籍 學生의 재입학을 허용하며 公權力을 대학 구내로부터 철수하기에 이르렀다.³⁾

교육 제도의 실시 방법 등에서 修正·改正·또는 補充이 되따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 같은 변화가 너무나 잦고, 또 대부분 教育學的 理論이나 哲學的 原理에 입각한 一貫性을 지니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바뀌어 온 대학 입시 제도나 졸업 정원제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부분 겉으로 나타난 증세만 우선 치료하려는 斷片的인 補完策 또는 臨機應變으로 코 앞에 닥친 어려움만 모면해 보려는 拙速 施策들임을 엿볼 수 있다.⁴⁾

이같은 교육 정책의 변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몇몇이 공개할 수 없는 意圖를 갖고 제도를 고치려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政權的 次元에서 故意的으로 고치려는 非教育的 行爲이다. 졸업 정원제, 학원 자율화, 學徒護國團, 敎授再任用制, 大學 3學期制 등의 변경 과정에서 정치적인 배경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수 없이 느낄 수 있었으며, 겉치레로 扮裝해 놓은 名分도 오래가지 못해 그 裏面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⁵⁾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大學政策은 결정 과정에서 政治的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狀況이었기는 하지만, 그러한 측면의 고려가 教育 본연의 기능과 원칙을 지나치게 支配해 온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른바 學園事態에 관한 關係機關 對策會議 같은 중요한 비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에서도 主務官署인 文敎部의 發言權보다는 權力機關들의 주장이 더 비중있게 受容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학교육 정책들 중에는 時代的 발전과 변천에 따라 必然的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바뀌거나, 잘못되어 있던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정책들이 많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長期的인 影響을 豫測하고 분석하는 기초 연구가 부분적으로 現場에 적용하여 妥當性을 검토해 보는 준비 과정이 없이 갑자기 革新的인 조치를 취했다가 부작용을 가져오고 試行錯誤로 끝난 事例들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1980년에 취해졌던 7·30 改革 措置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대학교육 정책들 중에서 시행착오로 끝난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類型들을 발견할

2) 曹康煥, 百年大計: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꾸고(大學教育 政策 變革과 背景), 서울: 호암출판사, 1985.
 3) 姜信澤, “文教行政”,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韓國行政의 歷史的 分析: 1968~1984,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4) 曹康煥, 前揭書, p. 11.
 5) 上揭書, p. 15.

수 있다. 먼저 動機 자체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政治的인 고려에 의해서 비롯되었거나, 執權層 혹은 文敎部長官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여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敎育理念이나 원칙 혹은 시행상의 문제점 등은 도외시하게 되므로 무리한 정책을 強行하는 사례가 많다.

다른 하나의 類型은 정책 수립의 動機와 목표 자체는 건전하고 합리적이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實務陣이나 中間管理層의 未熟으로 代案 자체가 잘못되어 정책 결정을 誤導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잘못은 담당자들의 능력 부족에서 빚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의 제약 속에서 실험적으로 現場에 적용해 볼 여유 없이 서둘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甚囂하는 바 크다.

이처럼 시행착오나 실패로 끝난 정책들의 決定過程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參與者가 극히 限定된 閉鎖的인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갖지 못한 채 拙速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교육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關聯 集團인 교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반응을 前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一般行政職으로 구성된 官僚集團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행정 전반에 걸친 不合理한 慣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集團行動化된 意思 表出에 대해서 지나치게 比重을 높여 두어 優先的으로 受容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통해 주장한 사항들은 그동안 정부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4. 大學敎育 政策決定의 바람직한 過程

정부는 이른바 6·29 宣言을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大學 自律化 추진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 국립대학 總(學)長 選任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사립대학 總(學)長 승진제

폐지, 敎授再任用制 개선, 學位登錄의 大學 委任 등은 금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大學의 학생 정원과 納付金의 책정, 그리고 대학 입시 등을 個別大學에 위임하는 조치는 實施 時期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에 비추어 不遠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大學社會에서는 물론 敎育改革審議會를 비롯한 정책 심의 기구에서도 이미 建議된 바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一方的으로 결정하여 발표했다는 비난은 적합치 않다. 다만 文敎行政當局이 政治的인 時流에 따라 政策의 基調를 一貫性 없이 바꾸어 온 점은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어떻든 政治·社會的인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새 政府에서의 대학교육 정책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여타 가지 이유에서 그것은 不可避한 命題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대학교육 정책은 그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도 民主的이고 合理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학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첫째로 대학 문제를 보는 巨視的인 構圖과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master plan)이 定立되어야 하겠다. 制度나 政策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修正·補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構圖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敎育改革審議會가 3년여에 걸쳐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先行 研究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大學敎育 改革 方案이 작성되어 있는 만큼 그러한 脈絡 속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敎育改革審議會의 報告書는 사실상 대학교육의 개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그 중에서 先後를 가려 優先順位를 設定하고 시급한 것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本格的인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文敎行政當局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른바 政策議題(policy agenda)를 選定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 의제란 정부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積極的인 해결책을 강구하려 하는 政策問題(policy issue)를 말

한다.⁶⁾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限定된 行政 人力과 예산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모든 문제들을 다루거나 政策 代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合理的인 優先順位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래에 대학 행정 분야에서는 政策議題를 選定함에 있어 이른바 學園事態 대책 수립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학 운영의 效率化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이나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支援 對策의 수립은 항상 소홀히 되고 뒷전에 밀리는 현상을 빚어 왔다. 이는 대학교육 정책의 수립에 정치적 고려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대학 정책 담당자들이 政策議題 選定의 優先順位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균형된 판단이 缺如된 데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대학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첫 단계인 政策議題의 選定에서부터 정치적인 영향력을 排除하고 순전히 教育的인 관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문제부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새 政府는 대학교육 정책을 다룸에 있어 각 대학들의 自律的인 결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교육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專門性을 바탕으로 한 自律化가 요청되는 분야이다. 대학 운영을 담당하는 敎職員들은 다른 어느 職種보다도 높은 資質과 倫理性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학 정책의 결정은 自律性을 부여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創意的이고 自發的인 노력과 效率的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앞으로 대학교육 정책을 다룸에 있어 行政 萬能的인 行態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해 주어야 하고, 감독하고, 報告를 받아야 한다는 思考를 止揚해야 하며 대학을 믿고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주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 입시만 하더라도 入試方法, 입시 시행 일자, 원서 작성·접수·처리 방법, 출제·채점 방법, 高校 內申成績과 體力章 반영 기준 등 모든 사항들을 문교부가 劃一的으로 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앞으로는 행정 당국이 직접 결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대폭 減縮하고, 각 대학의 自律的인 결정을 助長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째로 정책 결정의 合理性과 妥當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政策代案이 실천되었을 때 예상되는 影響(impacts)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실험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보아 그 정책의 全面的인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등 충분한 事前分析이 先行되어야 한다. 여기서 政策 影響 속에는 肯定的인 측면과 否定的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정책 목표와 직결되는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나 부작용까지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大學教育 분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정책들은 그 影響을 단기적·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미தி 포기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行態가 正當化될 수는 없다. 가능한 범위까지는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計量的 影響 評價의 限界性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어떤 政策代案이 실천되었을 때 예상되는 影響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른바 政策實驗(policy experiment)이다. 즉 실제 政策狀況이나 人爲的으로 조성한 환경 속에서 정책을 部分的·실험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 결과를 분석하여 全面的인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육 정책의 타당성을 政策實驗方式에 의해서 평가하고자 한 試圖가 더러 있었는데, 1973년에 착수된 實驗大學 운영이 그 대표적인 事例였다. 실험 대학 체제의 주요

) Roger W. Cobb and Charles D. Elder,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 Building*(Boston: Allyn and Bacon, 1972), p.96.

내용은 졸업 학점 감축, 계열별 학생 선발, 副專攻 및 複數專攻制 등이었고 실험 대학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실험 대학 체제는 初年度에 10개 대학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적용 대상이 追加되어 '80년대초부터는 사실상 전 대학에 확대되었다.

결국 과거의 實驗大學 프로그램은 대학교육 개혁을 실험적으로 적용·평가하여 全面的인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이 아니라, 輿件이 갖추어진 대학부터 先導的으로 적용하여 마침내는 全大學에 실시할 것을 前提로 한 일종의 示範事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實驗 評價의 목적도 妥當性 여부보다는 試行過程上의 문제점을 補完하는데 초점이 있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政策代案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現場實驗(field experiment)이나 模擬實驗(simulation)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왕에 政策實驗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효과를 誇示하거나 부작용을 파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원래의 目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네째로 대학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關聯人士들의 參與機會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겠다. 물론 과거에도 참여의 기회는 적지않게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公聽會나 諮問委員會 등이 성실한 의견 수렴의 裝置로 활용되기보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形式要件 위주로 운영된 느낌이 없지 않다.

정책 결정 과정에의 參與는 정책의 妥當性과 衡平性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同意와 支持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우선 大學教育 政策은 專門性을 要하기 때문에 衆智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게 되면 당연히 정책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 정책 대안과 직접·간접으로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집단들의 대표들을 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참

여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정책의 趣旨와 制約條件들을 이해하게 되므로 同意와 支持를 얻기가 쉬우며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에 後援者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 參與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利點이 있다. 특히 大學教育 政策은 관련되는 集團이 최고의 知性을 自負하는 教授들이기 때문에 專門的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교육 정책은 엄격한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정 과정을 公開하여 가능한 한 많은 參與와 討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에 參與를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政策案이 具體化되면 諮問委員會나 公聽會의 개최를 빈번히 하면서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와 병행하여 대학교육 정책의 경우는 政策代案에 관한 각 大學 또는 學會 나름의 意見書を 제출하게 한다든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대학 문제와 관련된 利益集團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요망된다. 즉 大學教育協議會를 비롯해서 私立大學財團聯合會, 全國大學教授協議會 등의 의견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諮問委員會를 구성할 때 그 대표들을 참여시킨다든가, 公式的으로 의견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새 政府는 權威主義의 清算과 自律化를 행정의 基調로 삼고 舊時代의 잘못된 慣行을 하나씩 是正해 나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 憲法에는 大學의 自律性 保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大學人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대학교육 정책의 결정 과정을 合理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해 본 여러 가지 노력들이 傾注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基調는 역시 自律化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

부나 行政家들이 官僚的이고 一方的으로 정책을 결정해 온 慣行을 탈피하여 충분한 事前 分析和 關係者들의 참여 속에 공개적인 검토를 거쳐 기본 방침을 확정하도록 해야 하며,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대학에 과감하게 위임하고,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학에 관한 정책은 그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이 더욱 自律化되고 合理的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

<大學教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教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와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教授를 초빙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협의회 大學教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教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 대학의 現職教授는 제외됨)

2. 登錄方法

본 협의회 소정 양식 '教授資源人事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接受處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대학교수초빙정보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783-3065, 3067, 3068, 3891)